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 살 가치가 없는 생명—자살의 사회적 차원과 자본-권력의 동맹체

정정훈_수유너머N

1. 자살의 일상화, 혹은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자살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하나의 표상과 함께 다가온다. 무엇인가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한강 다리의 난간에 올라가면 경찰과 기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들고 그는 경찰에게 다가오면 뛰어내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외친다. 그 장면이 한 동안 내가 자살을 떠올리면 동반되는 표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해프닝’을 벌인 이들이 정말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대개 ‘자살소동’으로 끝을 맺고 난간에 올라갔던 이는 무사히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자살소동을 벌이는 사람은 정말 죽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한강 다리의 난간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벌인 그 소동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는 모여든 사람에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벌이고 나면 난간에서 내려와 현실에서의 삶을 어쨌건 다시 시작할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누가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대신 누군가 ‘조용히’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들만이 종종 들려온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깊은 절망과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놓인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타인들에게 호소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침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이다. 그들은 살아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서라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이 마감된 이후 발견되는 유서를 통해서 겨우 말한다. 심지어 오늘날 자살하는 많은 이들은 유서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살이라는 사실만을 통해 말한다. 말이 아닌 말. 침묵과 동일화되어버린 말.

내가 자살이라는 사건의 무게감을 최초로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 개봉된 영화 한편을 통해서였다. 당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그 영화이다. 내가 중학생이던 80년대에도 대한민국은 이미 입시 지옥이었고 그 비정한 세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오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동일한 제목의 청소년 소설이 먼저 출판되고 곧 소설이 영화화되었다. 그 영화는 흥행하였고 입시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여전히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살로 그 지옥을 탈출하고 있다. ‘단힌 교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으며, ‘여고괴담’은 계속된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죽어가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자살소동을 벌인다고 그러한 소동을 벌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다. 자살이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의 1위인 한국사회, 40대와 50대 사망원인의 2위인 한국사회에서 구체적 개개인의 자살은 더 이상 강렬한 의미를 담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자살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다반사가 되어버

린 사회가 되었다. 마치 교통사고 사망이 그렇듯이 자살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정상적 위협과 같은 것이 되었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살을 선택한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버린 한국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 자살이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을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자살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2. 생명권력과 죽음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자살이라는 사회적 죽음의 함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약간의 이론적 우회가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생명권력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우리가 생각해보려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 유효한 우회로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 생명권력에 대한 푸코의 문제의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975년 초엽,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행해진 강좌인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였다. 이 강좌의 마지막 강의에서 푸코는 근대국가의 인종주의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규율권력과 다른 층위에서 기능하면서 규율권력과 함께 작동하는 권력으로서 생명권력의 문제를 논의한다.

푸코에 의하면 생명권력은 인구라는 범역적(global) 수준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활동에 대해 개입하는 기술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이다. 그것은 “출산율과 사망률, 다양한 생물학적 무능력, 그리고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개입했으며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의 앎을 선취하여 권력 개입의 장을 규정했다.”¹⁾ 권력의 이와 같은 개입은 인구의 생명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생명권력은 명백히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술”²⁾이다. 이는 푸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바

1)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역, 동문선, 1998, 283.

2) 같은 책, 287.

와 같이 권력의 생산적 성격, 즉 적극적(positive)인 차원을 보여준다. 생명권력은 무엇인가를 억압하거나 금지하는 소극적(negative) 방식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구의 생명활동을 보장하고 육성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 적극적 권력이다. 생명권력은 무엇보다 인구의 생명을 돌보는 권력인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생명권력은 무엇보다 관리 혹은 조절의 기술을 핵심으로 한다. 이 기술은 개개인의 인간 개체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인구를 관리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개체적 현상들이 아니라 집단적 현상을 관리하는 권력으로서 생명권력은 상당히 긴 시간 범위 내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권력이다. 즉 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비교적 장기적 시간을 통해서 인구 집단의 생명 현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권력은 인구집단의 우연적 요소나 현상들을 관리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우연성은 통계와 예측이라는 수단을 통해 관리된다. “요컨대 살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구에 반드시 있게 마련인 우연적 요소들 주변에 최대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삶의 질을 최적의 수준으로 만드는 그러한 규제 장치를 수립”³⁾하는 것이 생명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의 마지막 강의에서 푸코가 정말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생명권력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생명권력이 국가의 주된 권력 행사의 기술이 된 시대에 왜 국가에 의한 특정 인구의 제거, 학살 등이 발생하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군주의 권력을 특징짓는 생사여탈권이 일차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힘을 통해서 작동하며 신민의 생명/삶은 방치하는 권력(“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 둔다”)인 반면, 근대국가의 생명권력은 생명을 과장하며 육성하고 강화하며 죽음을 최대한 회피하는 권력(“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둔다”)이다. 그런데 군주권력은 일정하게 쇠퇴하여 왔고 생명권력은 강화되어 왔다. 그런데 왜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서 국가에 의한 대량

3) 같은 책, 284.

살육, 단지 정치적인 적들만이 아니라 자국의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생명권력의 통치 하에서 살육이 발생하는가? 즉 “생명권력의 경제 내에서 죽음의 기능”⁴⁾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 푸코가 생명권력과 관련하여 던지는 질문이다.

푸코는 그 원인을 생명정치와 결부된 근대의 인종주의에서 찾는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적 인종주의는 철저하게 생명정치적 현상이다. 생명권력은 전체 인구의 생명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구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나 그 인구에 내포된 특정 부분을 제거할 필요를 느낀다. 마치 개인의 유기체적 신체에 내포된 부분이지만 그 신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인구의 일정한 부분이 그 인구 집단 전체의 생명력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제거해야 한다. 이때 전체 인구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 인구의 부분이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생명권력이 인구 전체의 건강한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 그 인구에서 제거해도 되는 대상을 식별하고 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인식론적 장치, 혹은 지식의 격자 역할을 한다. 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파악하고, 이 종을 그 내부에서 다시 우월한 종과 열등한 종으로 분할하여 우월한 종이 열등한 종에 의해 오염되고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등한 종 자체를 말살하는 권력의 작동이 바로 생명권력과 결부된 인종주의의 효과이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제거해야 할 적이 정치적 의미의 적수가 아니라, 인구 전체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권력 체계 안에서 죽음에의 강제는 그것이 정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협의 제거, 즉 제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종 혹은 인종의 강화를 지향할 때만 수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인종 혹은 인종주의는 규범화 사회에서 죽음에의 강제를 수락하는 조건이다.”⁵⁾

4) 같은 책, 297.

5) 같은 책, 294.

생명권력 하에서 부정성으로서 죽음은 결코 일차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월한 인구 집단, 즉 우수한 인종의 건강을 강화하고 부양한다는 긍정적 작용을 위해 열등한 인종을 죽이는 부정적 작용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러한 생명권력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푸코는 판단한다.

이제 생명권력의 자장 안에서 사회는 인종적, 종족적 연속체로 표상된다. 생명권력은 그 연속체를 구성하는 인구의 생명력을 부양하고 강화하는 것을 자신의 중심적 목적으로 삼아서 작동한다. 반면 그 생명력을 저해하는 것, 위협하는 것에 대한 제거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된다. 범죄자와 비행자, 광인과 무능력자들을 비롯한 비정상적 행위자들이 바로 이 제거, 추방, 자격박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는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인종주의는 내가 한 종족이나 한 인구의 일원이고 살아 있는 다수의 통일체의 한 요소일 때, 타인들의 죽음은 내 자신을 생물학적으로 강화해 준다는 원칙에 의해 생명권력의 경제에서 죽음의 기능을 확보해 준다.⁶⁾

이러한 인종주의에 의해 ‘죽게 하고 살게 내버려 두는’ 군주권의 기능이 되 돌아온다. 생명권력은 주권이라는 죽임의 권력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맥락을 바꿔놓은 것이다. 자기 종족의 생명활동, 즉 사회를 그 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죽임의 권력으로서 군주적 지상권, 즉 주권의 기능이 유지된다.

3.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

하지만 이와 같은 생명권력이 특정한 인구집단을 전체 인구의 생명력을 저해하

6) 같은 책, 297.

는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제거하는 것, 즉 생명권력의 경제에서 죽음의 기능과 한국사회의 자살은 무슨 관계인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국가의 직접적 폭력에 의해 특정 인구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인종주의적 함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은 타당한 것이다. 나 역시 생명권력과 죽음 그리고 인종주의의 관계에 대한 푸코의 논의를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만연해 가고 있는 자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자살은 한국사회의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죽음이며, 나는 그 ‘사회적 맥락’이 권력의 작동방식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데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살 문제와 오늘날 한국사회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이 연관을 해명하는 데 푸코의 생명권력론은 개념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푸코는 생명권력의 경제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단지 국가폭력에 의한 특정 인구의 직접적 살해로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생명권력은 특정 인구 집단에게 죽음을 강제한다. 그러나 이때 죽음에의 강제는 단지 생물학적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다.

죽음에의 강제라는 말로 나는 단순히 직접적인 살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접적인 살인, 예컨대 죽음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 혹은 그저 단순히 정치적 죽음이나 추방, 방치 등을 의미한다.⁷⁾

즉 한 인구의 건강한 생명력을 저해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인구집단에게 생명권력이 행사하는 죽음의 권력(죽음에의 강제)은 그 인구집단이 더 이상 살

7) 같은 책, 295.

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인구의 생명활동을 약화하는 인구란 어떤 존재들인가? 푸코에 의하면 그들은 일차적으로 각종 유전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정신과 정서, 그리고 신체상의 장애 등을 가진 인구였다. 그야말로 ‘생물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로 분류된 이들이었다. 동시에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다양한 비행자들, 즉 비정상인들이 또한 그러한 위험한 인구집단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생명권력에 대한 푸코의 논의는 전체인구의 건강을 해치는 자들이 꼭 이렇게 직접적인 생물학적 장애로만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성의 역사 1권—삶의 의지』에서 푸코는 생명권력의 등장을 자본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 생명권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본주의에 불가결한 요소였으며, 자본주의는 생산 체제 안으로의 육체의 통제된 편입을 대가로 치르고 경제적 과정에 따른 인구 현상의 조절을 조건으로 해서만 확고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자본주의에는 육체와 인구의 증가, 그것들의 강화와 동시에 활용 가능성 및 순응성이 필요했으며, 힘과 적성과 전반적 삶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들의 예속화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권력행사의 방법들이 필요했다.⁸⁾

생명권력이 자본주의와 결부되면서 관리하고 조절하고자 했던 인구의 생명력은 무엇보다 노동하는 자들의 생산성과 순응성을 의미했다. 자본의 지배에 대한 순종과 노동의 효율성이 생명권력이 돌봐야 하는 인구의 생명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다는 것이다. 근대권력은 인간의 생명력을 가치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그 과정에 대한 순응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적 인간의 생명은 전체적 수준에서도, 그리고 개별적 수준에

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삶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출판사, 1994, 151. 강조는 인용자. 번역 일부 수정.

서도 이제 권력의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이 된다. 규율권력이 각 개별 신체를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적화하는 임무를 떠맡았다면 생명권력은 개별 신체를 넘어선 생명체의 전반적 수준, 즉 인구라는 전체적 층위에서 생명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개인에 대해 행사되는 규율권력과 인구에 대해 행사되는 생명권력이 서로 교차하며 인간의 생명은 생산에 활용되고 그러한 활용에 순응하게 된다.

생명권력의 헤게모니 하에서 작동되는 주권적 권력, 즉 인민에게 죽음을 강제하는 권력의 기능 역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성과 순응성이라는 문제틀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생명력을 저해하고 감소시키는 자들의 정체 역시 우리의 맥락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그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들이며 자본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다. 인구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부분, 가치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인구의 생명력을 저해시키는 위험요소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력이 제시하는 규범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규율에 의한 신체의 최적화를 거부하거나 그런 규율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 또한 그러한 위험요소이다. 순응하지 않는 불온한 자들,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무능력한 자들, 바로 이런 이들이 ‘죽음에의 강제’에 노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에의 강제가 단지 생명의 직접적 살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살육이 죽음에의 강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면 ‘죽음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 혹은 그저 단순히 정치적 죽음이나 추방, 방치’ 등은 소극적 작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푸코의 생명권력론과 한국사회의 급증하는 자살을 연관시킬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소극적으로 작동하는 죽음에의 강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권력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죽음권력은 위험한 인구집단들이나 불필요한 인구집단들에 대한 직접적 제거와 살해라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작동한다. 그

렇다면 이 죽음 권력이 소극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그러한 인구집단의 성원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유지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조건들과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생존을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들과 그러한 자원을 얻을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위험하고 불필요한 특정 인구집단의 생존과 생활을 극도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에 의해 무능하고 불온한 자들이라고 규정된 이들은 생존과 생활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추방’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곳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단지 생존을 위하여 투여하더라도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공간이며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삶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좋은 삶’(eu zen)이 아니라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생존’(zen)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⁹⁾ 아렌트의 개념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인간의 조건’을 상실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 속에서 추방된 자들의 삶은 더 이상 권력의 돌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생명은 생명권력이 돌봐야 하는 생명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각자 알아서 생존해 가야 한다. 권력은 그들을 ‘살게 내버려 둔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 역시 권력은 적극적으로 방지하려 하지 않는다. 권력은 그들을 또한 ‘죽게 내버려 둔다.’ 생명권력이 무능하고 불온한 자들에게 죽음을 소극적,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란 그들을 권리의 지대로부터 추방하는 것, 그들의 생명을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와 살 가치가 없는 생명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통치원리가 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존과 생활

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역, 이제이북스, 2006, 17, 20.

을 위한 자원을 박탈당한 자들,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즉 생명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죽음에의 강제에 노출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자원들을 박탈당하고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금지당하고 있다. 권력은 이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 속으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강제한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 그들을 가두며 그 환경 속에서 무능하고 불온한 자들로 규정된 자들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추방, 권리의 박탈,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화의 과정을 ‘사회적 배제’라고 개념화한다. 카스텔은 사회적 배제를 “특정한 개인들과 그룹들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제도와 가치에 의해 고안된 사회 표준 내의 자율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위치로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금지당하는 과정”¹⁰⁾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급증하는 자살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되어 있다. 배제된 자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고통과 절망만을 경험할 뿐이라고 느끼게 될수록 그들은 삶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지난 해 8월 1일 동작대교에서 19세 소녀가 투신했다. “고시원비도 밀리고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세지를 남긴 뒤였다. 이혼한 부모와 헤어져 혼자 살던 소녀는 고교 졸업 후 식당에서 일을 했다. 소녀가 투신한 지 한 달여 지난 9월 6일엔 여의도 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맸다. 그 자리엔 빈 소주 병 하나, 그리고 유서 녀 장이 있었다. 한동안 날품을 팔지 못한 그는 유서에 자신이 죽으면 장애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몇새째 되던 날 창원 마창대교에서 40대 남성이 난간을 붙잡고 버티던 11살짜리 아들을 떠밀었다. 곧 그도 뛰어내렸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대리운전으로 살아온 날의 끝

10) 마뉴엘 카스텔, 『밀레니엄의 종언』, 박행웅·이종삼 역, 한울, 2003, 97.

이었다. 다시 한 달쯤 지난 10월 19일 전주의 한 주택에서 30대 주부와 두 아이가 살해됐다. 남편은 집 가까운 곳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그는 2개월 전 실직했고 월세와 아이들의 학원비가 밀려있었다.¹¹⁾

삶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끼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둘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처지에 놓인 가족들의 생명을 자신의 삶과 더불어 종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살은 단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에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우울증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도 그와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사회적 배제라는 제도적이고 구조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은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간 우울증 진료인원은 2007년 52만5천명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7.4%가 증가하였고,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¹²⁾은 2001년 4.0%에서 2006년 5.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도 우울증 증가의 주요 원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는 실업률과 자살증가율, 소득양극화와 자살증가율, 가계부실과 자살증가율이 모두 양(陽)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들은 실업률, 소득양극화, 가계부실 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들이 악화되면 자살하는 인구의 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지표의 악화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현재의 지배적 경제질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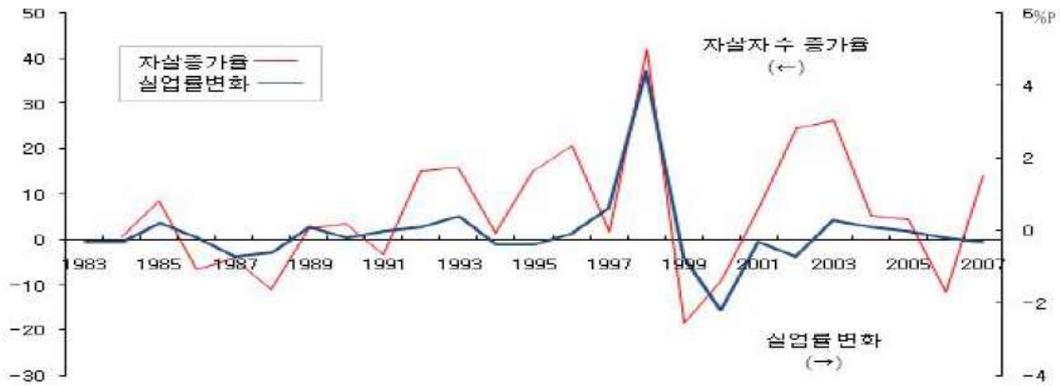
11) 이대근, 「우리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2011. 2. 17.

12) 평생 동안 주요 우울증에 한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 실업률과의 관계(전년도 대비)

○ 실업률 변화와는 陽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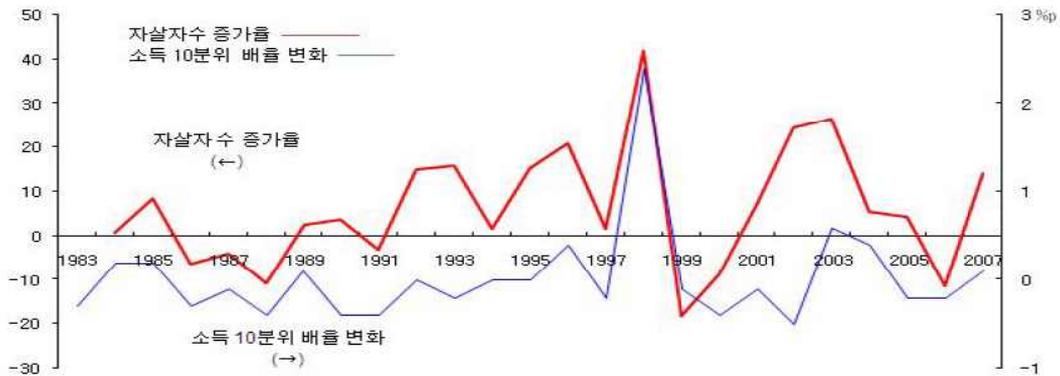
※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은 빈곤·파산·부도 등 限界線상의 사람들에게 자살 촉발 요인으로 작용



<자살증가율과 실업률변화 추이>

□ 소득양극화와의 관계(전년도 대비)

○ 소득분배상태(소득10분위배율⁵⁾)와 자살증가율과는 陽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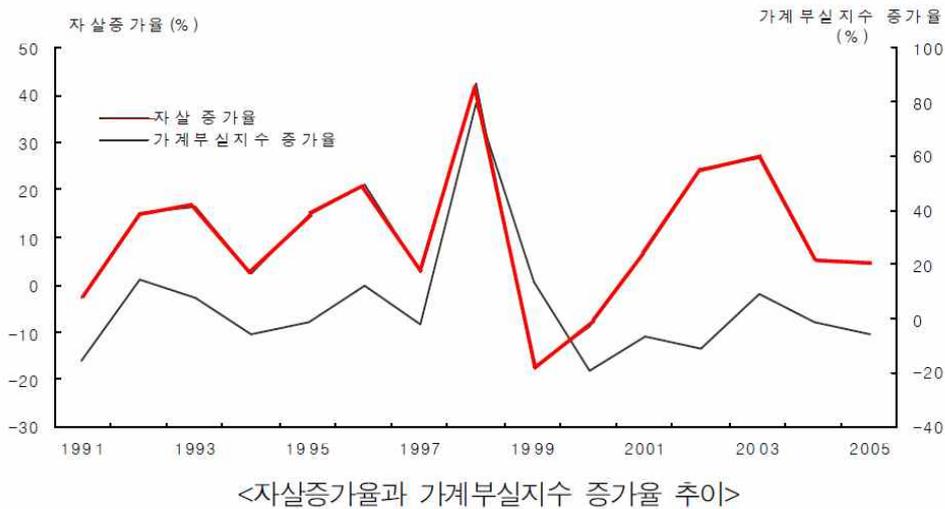


<자살증가율과 소득10분위배율 변화추이 >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 살 가치가 없는 생명—자살의 사회적 차원과 자본 권력의 동맹체

□ 가계부실과의 관계

○ 가계부실정도(가계부실지수⁶⁾)와 자살증가율과는 陽의 관계



동시장의 유연화가 추진되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노동인구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8% 수준이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7.3%에 달하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32% 수준이다. 더욱이 절반 이상인 56.5%는 아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직장가입비율이 98.6%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37.1%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1%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35.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¹³⁾

한국사회의 노동인구 중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못지않게 눈여겨 볼 사실은 일자리 감소와 실업인구의 증가이다.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1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정책국, 「보도자료: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비율,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2011. 이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orkingvoice.net/xs/index.php?document_srl=185630&mid=policy_data

면 실업률은 3.8%로 추정되어 OECD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하였지만, 이 수치에는 실질 실업인구에 포함되는 취업준비자,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18시간 미만 노동자 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실질 실업률은 11.3%이다.¹⁴⁾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운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의 경우는 63.3%에 불과하다. 고용률의 경우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된 34개 국가 중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의 증가는 경기후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997년 이후 시행된 산업구조조정 결과이다. 조명래에 의하면 이 시기의 구조조정의 특징은 “외환위기 동안 제조업, 금융업 등 성장기 경제를 주도해 왔던 구산업, 즉 시장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이 퇴출, 위축되는 반면, 새로운 경쟁력을 이끌 IT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이 신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산업구조 전반이 첨단화, 탈산업화, 경쟁화되는 것으로 재편되어 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⁵⁾ 이는 신자유주의 화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온 산업구조조정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재편의 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의 구조적 증가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인 지니계수는 2011년 현재 0.311를 기록하여 한국에서 지니계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¹⁶⁾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 정도의 심화 경향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구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자살이 생명권력의 작용에 의해 무능하고 불운한 자들로 규정된 특정 인구의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곧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다수의 인구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

14) 「2011년 통계청 실업률 3.4%…실체는 11.3%」, 『한국경제』, 2012. 1. 15.

15) 조명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편,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 2006, 61.

1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다. IMF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그 체제의 관점에서 생산성이 없다고 간주된 인구는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의 분배체제로부터 배제되며 생활과 생존의 수단을 박탈당한다. 자본은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며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한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자본의 개발이익을 위해 평생을 일궈온 일터에서 내쫓기고 농민들은 군사기지 건설, 골프장 건설, 핵발전소를 위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었던 땅에서 추방당한다.

이렇게 추방당한 자들, 배제된 인구는 삶의 가능 조건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고 생존은 온전히 그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권력이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유지하도록 방치되며 설혹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죽게 되어도 무방한 생명이다. 아감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생명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생명’¹⁷⁾이다. 아감벤은 가령 안락사의 문제와 같이 생물학적 생명의 유지 여부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결정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 결정의 문제가 주권이 작동하는 정치적 영역이 되는 사태를 논의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주권이 어떤 인간 혹은 인구의 생명에 대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그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제거의 실행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¹⁸⁾ 특정 인구로부터 생존과 생활을 위한 가능 조건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죽느니만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권력의 작동은 정확히 특정한 인구의 생명을 암묵적으로나마 더 이상 살 가치가 없

17)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18) 가령 나치의 경우나 스탈린 정권이 그와 같은 결정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제거하고 종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적 맥락에서는 권력에 의해 살 가치가 없다고 결정된 자들이 국가장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거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 그러나 아감벤은 이러한 권력의 작동방식이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한 특정한 독재권력의 횡포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감벤에 의하면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주권 권력의 핵심에 놓인 차원이다. 여기서 아감벤은 근대의 주권 권력의 중핵에는 생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생명권력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그는 생명권력화된 주권 권력의 일반적 구조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다.

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살 가치가 없는 생명에게는 삶을 위한 수단들이 박탈되며 그러한 박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알아서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게 된다면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 된다.

5. 자본-국가 동맹체라는 사이코패스

푸코는 생명권력의 문제의식을 국가를 권력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하려는 기획 속에서 구축하고 있다. 그는 국가에 어떤 본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그것이 권력을 실행하는 방식과 기술의 측면에서 규정하려고 한다. 푸코에게 근대적 국가란 생명권력이라는 권력의 행사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푸코는 근대국가가 생명권력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푸코는 생명권력이란 사실상 국가와 자본의 동맹 내지는 결속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¹⁹⁾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본-국가의 동맹체의 권력행사를 배제된 자들이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죽음에의 강제에 대해 박탈당하는 자들은 저항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저항에 직면할 때 자본-국가 동맹체의 생명권

19) “권력 <제도>로서의 거대한 국가기관들의 발전이 생산 관계의 유지를 보장했다면, 사회체의 모든 위상들에서 나타나고 대단히 다양한 제도들(가족, 군대, 학교 또는 경찰, 개인에 관한 의학 또는 집단들에 대한 행정)에 의해 이용되는 권력의 <기술>로서 19세기에 창안된 해부·생명정치의 기본 사항들은 경제적 과정과 그것의 전개 그리고 그 과정에 끼어들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력의 위상에서 작용했으며, 또한 사회적 차별과 계층화의 요인으로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두 가지 움직임 각각의 세력에 영향을 끼쳤고 지배 관계와 패권 효과를 보증했다. 그리고 인간의 축적을 자본의 축적에 맞추어 조절하고 인간 집단들의 증가를 생산력의 확대와 이윤의 차별적 배분에 결부시키는 두 가지 조작은 다양한 형태 아래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권력의 행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삶의 의지』, 152).

력은 군주적 죽음권력의 면모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우리는 이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의 현장에서, 용산 남일당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현장에서 용역깡패와 경찰특공대로 각각 표현되는 자본과 국가의 동맹체가 행사하는 죽음의 권력을 목도하였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과 용산 남일당에서 배제와 추방에 맞서 저항하는 자들은 진압 과정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존재들로 치부되었다. 실제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들의 투쟁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섯 명의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살인적’ 진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은 없었지만 그 이후 끔찍한 폭력의 기억과 정리해고라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물 네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포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언론은 이 사건의 범인이 얼마나 잔혹한 범죄를 일삼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하였고 또 범인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에 집중된 대중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는 홍보지침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공문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며 홍보방식까지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공문에 의하면 군포연쇄살인사건은 “용산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정부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범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연

쇄살인범을 치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시민의 안전과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용산에서 그들이 행한 잔혹한 폭력을 묻어버리려 했다. 용산 철거민들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재개발을 명목으로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을 용역깡패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제거해버린 잔혹한 폭력을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이라는 또 다른 잔혹한 폭력의 이미지로 덮으려 했던 것이다.

흔히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보이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손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라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단지 군포연쇄살인사건의 범인 강호순만이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또 다른 사이코패스로 지목 받은 유영철이나 김길태와 같은 이들만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고 죄의식을 결여한 반사회적 장애를 가진 자들일까? 국가에 의해 잔혹하게 행사된 폭력에 집중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이코패스 범 죄를 적극 보도하도록 유도했던 대한민국 정부야 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조건이었던 직장에서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정리해고하는 자본이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을 감수하면서도 저임금에 고용안정성도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 질서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생계를 해결할 수단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쫓기고, 생존의 가능 조건을 박탈당하도록 하는 이 체제야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그들을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몰고 가는 자본과 국가의 동맹체, 죽음의 고통을 삶의 고통보다 더 적다고 느끼도록 몰아가는 자본과 국가의 동맹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닐까?